

# '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

2022. 8. 19.

관계부처 합동

## I 추진 배경

- '첨단기술의 전략자산화' 경향 가중에 따라 기술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 → 핵심기술정보인 영업비밀 유출 위험·피해 증가\*

\*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기술 해외유출시도는 99건, 22조원대 규모 (국정원),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GDP의 1~3%, 우리 피해액은 최대 60조원 육박 추정 (특허청)

## II 현황 진단

- (보호수준) 기업의 절반(48%), 대학·연구소의 1/3(31.4%)만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인지하는 등 보호수준이 낮은 편('21, 특허청 실태조사)
- (유출피해) 최근 6년간('16~'21) 11%의 기업이 유출피해를 경험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이 빈번('21, 특허청 실태조사)
- (유출대응)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무대응 비율이 1/4(23.5%)에 달하며, 사법구제에 있어 낮은 기소율\*, 높은 무죄율\*\* 등 대응에 어려움 존재
  - \* 영업비밀 사건 기소율(9%)은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(32%) 대비 3분의 1 이하('16~'20)
  - \*\* 영업비밀 사건 1심 무죄율(35%)은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(3.4%)의 10배 수준('17~'19)

## III 추진 과제

### 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

- ① 중소기업·대학·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 해소
  - (협력사·중소기업) 핵심산업(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) 협·단체와 협업하여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 집중지원\*
  - \*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, 관리시스템 보급, 임직원 교육 등
  - (국가 R&D 수행기관 등)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R&D 수행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 점검·해소

## ② 영업비밀보호 인식제고

- 대기업-협력사-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\* 추진  
\* 협약체결 : ('20) KT, LG이노텍 → ('21) 포스코 → ('22) 1개社 이상 추가체결
-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 공동 개최\* 등 인식제고  
\* 전경련·국정원·특허청 공동 세미나(8월), 한국무역협회·특허청 공동 세미나(10월) 등
- 기업 임직원 및 대학·대학원생 대상 기술보호 교육 제공

## ③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 마련

-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 대상 법률지원(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) 확대\*  
\* ('21) 뉴욕 IP-DESK → ('22) 미국·독일 등 11개국의 17개 IP-DESK

## ②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

### ① 신속·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·조사 협조체계 구축

- 기술유출 수사·정보기관 간 협업\* 강화  
\* ①수사·정보기관 및 관계부처 참여 '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' 운영,  
②'국가방첩전략회의'에 특허청 참여 추진, 방첩활동에 특허정보 활용 강화
-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가능 하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\* 확대 조정  
\* (현행) 영업비밀 무단 취득·사용·누설 행위, 특허, 디자인 →  
(개선)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(무단유출·부당보유 행위 등 추가)

### ②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

- 법률자문(180개社), 디지털포렌식(110개社) 지원 및 분쟁조정 활성화

### ③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선진화

-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(원고) 입증부담 완화\* 법적근거 마련 추진  
\* 피해자 주장 침해행위를 부인하고자 하는 침해자에게 자신의 실시행위 제시 의무 부과
-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\* 도입 검토\*\*  
\* (현황) 지재권 중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품종보호권 민사본안에만 도입  
\*\* 지재위 산하 특별전문위원회(관련부처 국장급 참여)를 통해 추진

### ③ 新 환경변화(기술패권경쟁, 디지털전환)에 대응한 **보호기반** 마련

#### ①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

-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·정확한 심사 제공 추진
-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**브로커 행위 처벌 법적근거** 마련 검토

#### ②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

-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 활용
  - \* 신규출원 특허의 국가핵심기술 관련성 등 분석, DB 구축·모니터링 → 보유기업 파악 등에 활용토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 제공(분기 1회)
- 해외유출\* 및 조직적 유출\*\*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\*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, 산업스파이 행위 공소시효 특례 등 검토
  - \*\* 개인·법인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죄의 벌금형을 3배 강화

#### ③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강화

-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 공동 대응
-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
  - \*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영업비밀 데이터 변경·삭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제 검토

### ④ 부정경쟁방지

- 데이터 부정사용,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,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\* 추진
  - \*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, 개정법 설명회 개최,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등
-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하여 관계부처·유관기관(협·단체 등)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 수행 및 신고센터 운영방안 마련